

# 공생과 공존의 교육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어느 날, 시골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찾아 와 말했다. 큰아이는 올해 4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3학년인데, 3학년이 되면서 영어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영어 독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한숨 섞인 하소연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시험점수를 20점을 받았는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걱정은 산처럼 커져갔다.

“남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학원을 보내는 등 야단법석인데 이렇게 만날 놓아먹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엄마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깊이 자책했다. 시골에서 사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고민 고민 끝에 애들 아빠한테 의논하여 서울은 못 갈망정 소도시라도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남편은 그대로 묵살하더라. 초등학교 다닐 때 놀지 못하면 언제 놀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더라는 것

이다. 하지만 도시 아이들 따라가려면 마냥 시골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옛날 땡자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위해 공동묘지 부근에서 시장 옆으로, 다시 학교 아래로 세 번이나 이사했다. 이 땡자의 “땡모삼천지교”는 환경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나, 땡모가 세 번씩 옮기는 과정에는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교육 철학이 들어 있다. 교육은 철학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욕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자’의 시에 “하나를 심어 백을 수확하는 것이 사람이나.” 했다. 그러려면 교육이 철학이 되어야 하고 인적 자원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자식 교육이 참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룻밤 자고 나면 바뀌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요즘 아이들이 성장 되고 있으니 부모로서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뿐이 아니다. 부모들은 아이들보다도 세상 적응 속도가 훨씬 느린 세대가 되고 말았다.

어른들은 과거의 속도로 살고, 아이들은 미래의 속도로 생활한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된 채 각자도생이 돼버린 세상이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식으로 나는 내

방식으로 살고 있다. 사람이 하나를 심어 백을 얻을 수 있으려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생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존적 삶의 가치를 운운했다. 공존이라 하면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공생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산다는 의미이다. 얼핏 보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커다란 차이가 숨어 있다. 공존은 인정해 주는 일이고, 공생은 사는 일. 살아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공존과 사는 일을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 있는 현상을 말하는 공생. 지금은 공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갈수록 사람 향기를 잃어가는 삭막한 세상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배우는 교육이 그리운 시대다. 우리 교육도 AI, 메타버스, 로봇 교육이 성큼 다가와 있다. 머지않아 교과서도 교사도 없는 교육이 등장할지 모른다. 벌써부터 챗 GPT에서 모든 글쓰기가 되는 세상이니 말이다. “지수에게 보내는 편지” 하고 클릭했더니 구구절절 편지가 도착했다.

모든 일을 로봇에게 빼앗기고 나면 “인간이 설 땅이 어디 있을까?”가 고민이 된다. 인간이 발명한 로봇시대에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앞에 시골에서 찾아온 학부모의 고민이 겹쳐진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1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시리아 이주민 사미르 무함메드 아카르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면서 의료진과 애기하고 있다. 아카르는 아내, 12세 아들과 함께 296시간 동안 아파트 잔해 속에 매몰됐다가 모두 구조됐다.

안타키아=AP/뉴시스

### 서석대

얼마 전 전남대학교병원에 소아과 레지던트 2명이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해주던 수련교수의 표정이 어찌나 밝던지. 그도 그럴 것이 지역 병원에 소아과는 진작에 지원자가 씨가 말랐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돈 되고 환자 많은 내과는 바글바글하다.

전남대병원 2023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 정원은 94명을 모두 채웠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81명 정원에 69명을 뽑아 85%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의 문제로 부각됐던 소아청소년과에 2명이 채용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해당과는 지난해 단 한명도 뽑지 못해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좋은 병원은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로 직결된다. 필수 의료진 역시 지역의 복지의 척도다. 그런데 언제까지 대학병원 자체에게만 맡길 것인가. 여기에서 필수 의료진이 탄생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엔 지원자가 생기도록 우리의 세금을 쓰는 것은 어떤가. 필수 의료진이란 꼭 있어야 하는 의료진을 말한다. 이런 의료진 확보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마침 전북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니,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대접도 해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바라는 것은 정말 이기적

인 마음이다. 침언하자면 ‘대학종합병원’이란 단어는 광주와 전남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없다면 지역민들은 크고 작은 병이 생길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더욱이 이 두 병원은 지역의 의료 공공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 두 병원이 제일 먼저 준비를 하고,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이 두 병원이 우선적으로 나선다.

### 지역 대학종합병원에 대한 단상

전남대병원이야 국립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대병원은 사립임에도 많은 것을 책임진다. 실력도 출중하다. 지면에 옮기기 벅찰 만큼 다양한 수상들을 했고 ‘명’로 불리는 의사들도 많다. 그럼에도 지역의 많은 중환자들은 서울로 간다. 왜냐고?

병원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병원들이 화려하고 깔끔하게 변신할 동안 지역 대학 종합병원들은 많은 것들을 등에 지고 앞으로만 나아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득은 투자와 연결된다. 그런데 이 두 병원은 이득을 투자로 연결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 전혀 이득이 나지 않는 과나 병동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 두 대학병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어차피 본질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니까.

노병하 사회부장

#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현안 해결되나

## 국토장관 “최적안 조기 확정”

순천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공식 피력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전철화 사업에 중대 번곡점이 생겼다. 문금주 전남행정부지사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 오전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구간 우회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이날 문제 해결의 결실물로 여겨진 기본 계획 변경, 예산 증액과 사업 기간 증가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부산 부전(총

286.7km)을 잇는 기존 경전선 곡선 구간을 직선으로 편 뒤 최대 시속 250km의 전기동력 열차를 투입하는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사업은 전남 중·동부권 지역 숙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과하고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사업 착수를 목전에 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관규 시장이 순천 노선의 도심 통과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중단됐다. 도시를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타와 사업 계획이 통과됐는데, 고압 전철 구조물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게 될 경우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고 생태도시라는 도시 정체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순천 지역구 의원 배출을 노리고 있는 점에서 정부와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여 경전선 도심 우회 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현안 해결에 호기를 맞은 만큼 전남도와 순천시는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검토하는 해법중 지역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 농수협 전남이전 치밀하게 추진해야

## 지역사회 유치 분위기 확산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불균형 완화와 농·수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업의 거점인 전남으로 이들 기관이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과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남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다.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찾기 위한 고충도 느껴진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방화 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어촌계협의회 등 농·어업 관련 단체들도 이들 기관의 전남 이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기관 배정 시 지역별 격차나 경쟁력 등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도 뜨겁다.

농·수협은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이다. 이런 기관이 농·수·축산업의 주축이면서 이들 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해 온 전남으로 이전할 경우 농·수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농·수산업과 생명식품생산기지인 전남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1차 이전해온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들과 연계될 경우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의 창출도 가능하다.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농업과 관련된 신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적극적 정책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이들 기관의 이전이 미래 전남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이라는 각오로 농·수협의 전남 이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두가 윈-윈하는 농·수협의 전남 이전이 필요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